부처합동	보 도 자 료 2019년 5월23일(목) 조간 (5.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담당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과 장 사무관	정제룡 박승기	044-205-6230 044-205-6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과 장 사무관	이경림 한재준	02-2110-2444 02-2110-2426
관련 기관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	단 장	허정은	042-869-7704

약물 성범죄·대형 산불, 과학기술 활용해 긴급대응 한다

-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터널 사고, 지역별 안전도 진단 등 긴급대응연구 본격 착수 -

- 행안부·과기정통부, 공고기간 단축·절차 간소화한 Fast Track形 R&D 추진 -

□ 버닝썬 사태로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 최근 대형 산불로 필요가 제기된 **산불의 확산예측과 신속한 상황전파, 터널 내 2차 사고 방지,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등 **최근 문제된 이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는 5월 23일(목),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4개 과제를 공고**하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 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2년 ⇨ 2달 이내)한 19년 신규 R&D 사업(과기정통부, 행안부 협업)
* '19년 예산 28억원(과기정통부 23억원, 행안부 5억원)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슈 모니터링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실증-현장적용**까지 **전주기적 문제해결**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추진 체계>

1단계(사전준비)			2단계(기술개발 및 실증)	3단계(적용·확산)
과기정통부	- 분야별 전문가 Pool, 기존 R&D DB화 등	문제 발생	R&D 기술개발 및 실증 동시 실시 - 현장 대응 및 복구 - 원인 규명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非R&D 기술개발 결과 적용·확산 - 기술구매 및 현장적용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행안부	- 위해요인 사전예측, 자원관리·지원체계 준비 등		과기정통부 + 행안부	행안부, 수요부처(지자체)

○ 이번 사업의 특징은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2년 ⇨ 2달 이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Fast-Track形 R&D사업**이라는 점이며,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령을 개정**(공고기간 단축·생략 가능) 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19.3월)

> 제6조 1항 4호(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4개 과제는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로부터 제기된(4월) 35개의 긴급현안 수요 중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17개 부처·청 및 광역지자체 참여, 4.30)”**에서 추진이 결정되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최종 선정과제>

과제명	수요 기관
약물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경찰청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	산림청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	대구시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	행안부

○ **행안부・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4개의 과제를 23일자로 공고**하고 **(공고기간 : 5.23 ~ 6.6, 2주)** 선정된 과제에 대해 **1~2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제기 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나서게 된다.

※ 공고: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

◆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경찰청)

□ 최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슈가 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주류·음료 등에 성범죄 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낮은 단가의 휴대용 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경찰청이 적용·확산을 주관하여 일반 국민들도 탐지 키트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산림청)

□ 최근 겨울고온, 건조일수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건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정보(풍향, 풍속 등)의 실시간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불현장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 현장담당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정보전파 서비스를 개발한다. 개발된 기술은 산림청을 통해 산불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대구시)

□ 터널 사고는 공간의 밀폐성으로 인해 외부 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고 특히 지자체 관리 터널은 사고감지시스템 미비로 사고발생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터널 내 돌발사고 감지 기술과 위험 상황의 신속한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행안부)**

□ 최근 KTX 탈선, 고양 저유소 화재 등과 같은 다수부처 관련 신종·복합 사회재난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재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의 위험요소 발굴·분석, 관리역량 진단 등 지역의 사회재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긴급연구를 수행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새로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긴급대응연구는 시급한 재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지역 현장의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과제별 부처·지자체 담당부서·담당자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실	정병권 총경(☎ 02-3150-2504), 조현진 경정(☎ 02-3150-2605)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준상 과장(☎ 042-481-4130), 한동길 사무관(☎ 042-481-4137)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관	신태균 과장(☎ 053-803-3120), 홍병탁 사무관(☎ 053-803-3130)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과	장 한 과장(☎044-205-6110), 박승주 사무관(☎044-205-6115)

【붙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개요」

붙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신종 감염병**, 도심지 **대형 싱크홀**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

○ 한편, 이러한 재난 · 안전 문제들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특정 부처나 연구 기관의 대응으로는 **실질적 대응 및 문제해결이 곤란**

* (예시) **가축 전염병** ⇨ 축산농가 타격 + 인간 감염 위험 + 환경파괴 **복합피해 발생**

⇨ **부처 협업 기반**(과기정통부 + 행안부)의 **혁신적 긴급대응체계** 마련

□ 사업 개요(안)

○ (사업 목적)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 이슈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준비** ⇨ **긴급R&D**(기술개발 및 실증) ⇨ **적용·확산**을 통한 **현장 지원**의 **전주기적 재난 · 안전 사고 대응**

1단계(사전준비)			2단계(기술개발 및 실증)	3단계(적용·확산)
과기정통부	- 분야별 전문가 Pool, 기존 R&D DB화 등	문제 발생	R&D **기술개발 및 실증 동시 실시** - 현장 대응 및 복구 - 원인 규명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非R&D **기술개발 결과 적용 · 확산** - 기술구매 및 현장적용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행안부	- 위해요인 사전예측, 자원관리·지원체계 준비 등		**과기정통부 + 행안부**	**행안부, 수요부처(지자체)**

○ (사업 규모) '19년 **28억원**(과기정통부 23억원, 행안부 5억원) / 과제당 2년 이내

- **(사전 준비) 사고 신속 대응 및 효과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이슈별 전문가 Pool 구성, 위해요인 사전예측 등) * 3억원

- **(기술개발 및 실증)** 사고 **현장대응, 피해복구, 조사분석** 및 **원인규명 등 긴급 R&D**(실증 포함) 지원 * 25억원

- **(적용·확산)** 연구개발 성과 **현장 적용**(기술구매, 제품화), 재난지역 **현장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 행안부(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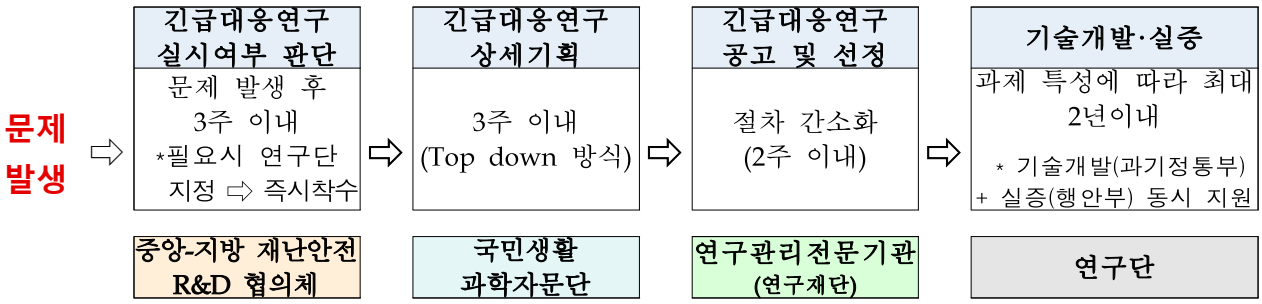
○ **(추진 절차)** 대응여부 결정(**중앙-지방 협의체**) ⇨ 긴급대응 연구 기획(**국민생활과학자문단**, 중점대응기관*****) ⇨ **연구단 선정** ⇨ 기술개발 및 실증

* 주요 이슈별로 산·학·연 전문가, 과학기자 등 총 113명으로 구성 · 운영

** 먹거리, 질병 등 7대 문제분야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 대응기관 지정· 운영

- **시급히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연구단 지정**(미공고), **공고 기간 단축** 및 **제출 서류·평가절차 간소화**한 **Fast Track**型 **긴급연구 체계 도입**

- **공공서비스 부처 긴급R&D 수요 반영**을 위해 **정기적 문제발굴 병행**



■ **(문제 대응) 현장 복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및 현장 적용

* (예시) 재해로 인해 손상된 문화재 복원 기술개발 및 적용

* (예시) 식중독 사고 대응 식중독균 신속검출 기술 실증 및 적용

* (예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인타임 위기대응 시스템 개발·적용

■ **(재발 방지) 원인 규명, 피해확산 방지** 등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

* (예시) 신종 감염병 대응 공간방역 장비개발 및 실증(의료시설, 역사 등)

* (예시) 특정 지역 싱크홀 발생에 대한 원인 및 주거안전성 분석

* (예시) 유해 외래종(붉은불개미 등) 유입 위험성 분석 및 방역 기술 적용

- 긴급대응 연구 후, **(필요시) 일반 R&D 후속연구** 과제 추가 기획

<참고>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VS 일반 재난 안전 R&D**

유형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일반 재난 · 안전 R&D
목적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
주관	**R&D 부처**(과기정통부) 및 **재난대응 부처**(행안부)의 유기적 협업	먹거리(식약처), 환경오염(환경부), 감염병(복지부, 질본) 등 **개별 대응**
주요 특징	**(절차)** 재난발생 **2개월내** 연구착수 **(연구기간) 최대 2년** (실증,적용포함) **(평가) 실질적 문제해결 여부**	**(절차)** 연구착수까지 **1~2년** 소요 **(연구기간) 3~5년** (연구기간만 산정) **(평가) 논문, 특허, 기술료**